식품 안전 정보

1. 위생 점검

1) 설식품 점검, 75개 업체 적발…유통기한 지나고 비위생적 취급

(2022-01-27, 매일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에 많이 먹는 식품의 위생을 점검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75곳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음. 식약처는 지난 10~14일 17개 지자체와 함께 설 성수 식품을 제조 · 판매 · 유통 · 수입하는 업체 5천618곳을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개 업체를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음.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일지 등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3곳) 등 업체들을 적발했음. 식약처는 한과, 떡류, 주류, 부침개 · 튀김 등 조리식품, 농 · 축 · 수산물 등 2천490건을 수거해 잔류농약과 식중독균 등 항목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천413건 중 8건에 부적합 판정을 내렸음. 관할 관청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에 대해 폐기 처분 등 조처를 할 예정임. 나머지 1천77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임. 식약처는 고사리 · 참조기 등 농 · 축 · 수산물과 가공식품,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수입식품 397건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위해 항목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방침이라고 밝혔음.

2) 정부, 식중독 예방위해 학교급식 위생관리 강화

(2022-02-23, 연합뉴스)

정부가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과 식재료 공급 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함.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33곳과 함께 23일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 영상회의를 열어 올해 식중독 예방관리 방안을 공유했음. 정부는 우선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 급식과 이곳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에 대한 위생 점검을 강화함.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활용해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모니터링을 시행함. 또 함께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식중독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는 한편, 식중독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모의훈련을 실시하기로 했음. 정부는 이와 함께 위생등급제를 활성화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고, '덜어 먹기' 같은 식문화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음. 교육부는 학교 급식 위생 관리를 강화기로 했고, 국방부는 병영식당 위생 점검과 먹는 물 수질 검사 등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음.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하수, 하천수를 사용해 재배하는 채소류와 함께 고기, 달걀 등에 대해 식중독균 검사를 연중 실시하기로 했음.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집단급식이 이뤄지는 학교 · 유치원 · 어린이집에서 식중독을 예방하는데 노력해달라"고 강조했음. 김 처장은 또 "집단급식소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업무공백에 대비해 대체 인력을 확보하고, 급식시설 폐쇄 시 안전한 대체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체 업체도 사전확보해 달라"고 요청했음.

3) 공단 근로자 안전한 식사하도록…창원시, 음식점 대상 위생점검

(2022-03-10, 매일경제)

경남 창원시는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단 내 음식

점과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근로자의 밥상'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음. 시는 오는 18일까지 공단지역 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운영 형태와 급식 인원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함. 이후 80곳을 선정해 오는 10월까지 영업장 위생 상태, 오염 진단, 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임. 위생용품과 주방환경 개선비 명목으로 1곳당 12만원 상당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사업체 집단급식소 315곳과 위탁급식업소 252곳에 대해서는 전수 위생 점검을 함. 미비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교육을 할 예정임. 시 관계자는 "급식 인원이 많은 공단지역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가 날 우려가 높다"며 "선제적으로 위생 점검에 나서자는 취지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음.

2. 식품첨가물

1) EU, 식품첨가물 이산화티타늄 사용 제한 (2022-02-06, 더구루)

EU가 식품의 색을 또렷하게 만드는 데 널리 쓰이는 이산화티타늄의 사용을 금지하기로 하면서 유럽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음.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E171'이라는 명칭으로 널리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음. 해당 규정은 유럽 관보 발표(지난 14일) 20일 이후 공식으로 발효되며, 6개월의 전환 기간을 거쳐 시행됨. 이산화티타늄이 들어간 식품은 규정이 발효된 이후 최대 6개월까지 시장에 출시될 수 있으며, 해당 제품의 유통기간이 끝날 때까지 판매할 수 있음. EU 집행위원회는 이산화티타늄을 식품첨가물로 쓰는 것을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유럽 식품안전청(EFSA)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런 결정을 내렸음. 이산화티타늄은 소금 알갱이 1만분의 1 크기의 나노입자임. 식품의 색깔을 선명하게 하고 자외선에 의한 영양소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자, 사탕, 껌, 빵 수프 등 다양한 식품에 사용되고 있음.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이산화티타늄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쌓이자 EU 집행위원회가 대응에 나선 것임. 이산화티타늄은 계속 섭취하면 장의 점막이 상하고,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는 것은 물론 철, 아연 등 영양소 섭취를 방해받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음. 특히 어른보다 사탕이나 과자를 많이 먹는 어린이들이 이산화티타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유럽에서 사업을 펼치는 한국 식품 기업이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임. 이산화티타늄 사용을 다시 검토하거나, 필요하다면 제품 라벨링에 경구 문구를 새기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임. KOTRA는 스텔라 키리아키데스 EU 보건 및 식품안전 정책 담당위원이 "식품 안전과 시민의 건강은 타협할 수 없으며, 우리는 오늘의 이 금지 규제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식품첨가물을 제거한다"면서 "식품 기업이 E171을 식품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원국 관리당국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음.

2) 햄 등 육가공품 '아질산염' 글로벌 기준과 조화를 (2022-03-11, 식품음료신문)

햄, 소시지 등 육가공제품에 함유된 아질산나트륨에 대한 까다로운 국내 기준으로 인해 국내 업계가 글로벌 제품과의 경쟁에서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글로벌 트렌드와 보폭을 같이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식품 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 제정고시(안)를 시행하고 있음. 고시에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 또는 제조 공정 중에 생성되는 성분이 해당 제품에 없거나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 아질산염의 잔류량이 완제품에서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아질산염 무첨가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임. 사실상 '아질산염 무첨가'라는 말을 쓸 수 없게 된 것인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육가공제품에 아질산염 함유 여부를 구별할 수 없게 됐음. 천연에 존재하는 질산염은 돼지고기, 소금 등 어느 원료에서도 아질산염

으로 환원될 수 있고, 아질산염을 넣지 않은 화이트소시지의 경우에도 아질산염은 검출될 수 있어 무첨가 표기를 할 수 없음.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질산염을 잔류량으로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아질산염을 넣는지 안 넣는지는 개발자와 생산자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실임. 첨가하지도 않았는데 무첨가 표기를 할 수 없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이유와 개발 의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음.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최근 영국은 무첨가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천연 대체제인 샐러리분말 및 아질산염이 들어간 제품에 '아질산염 첨가'라는 문구를 넣도록 권고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아질산염을 단계적으로 빼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아질산염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 다른 국가들은 WHO 발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표기 금지법만 만들어서 아질산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보편화되고, 샐러리분말을 쓰거나 복합염지제 등으로 아질산염을 숨겨 표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음. 그는 "아질산염이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단백질 공급원인 육가공제품까지 부정적 시각으로 몰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음. 무첨가 표기를 금지하면서 감출 것이 아니라 왜 몸에 안 좋은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몸에 좋은 무첨가 햄, 소시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올바른 규정으로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음.

3) 코로나에 수요 급증한 살균소독제 불법 제조·판매... 일당 적발

(2022-03-17, 연합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유명 업체의 살균소독제 신고번호를 도용해 불법 제품을 판매한 업자 6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힘. 적발된 A 판매업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방역용품인 살균소독제 수요가 급증하자, 유통 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B 제조업체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제품 생산을 의뢰했음. 이때 B 제조업체는 동종업계에서 유명한 C 업체의 식약처 및 환경부 신고번호 등을 도용해 제품 라벨에 그대로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음. 신고번호를 도용당한 사실을 안 C 업체가 A 업체에 여러 차례 항의했지만, A 업체와 B 업체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를 바로잡지 않았음. 되려 A 업체는 생산한 불법 살균소독제를 유사 제품보다 비싼 가격으로 35개 온라인쇼핑몰에 올려 약 2억3천만 원어치를 판 것으로 조사됐음. 매출액을 늘리기 위해 가족을 동원한 회사를 추가로 설립하여 판매하기도 했음. 또, A 업체는 해당 제품이 채소 등 식품에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용 살균제 기준규격 검사를 한 결과 전부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A 업체는 서울시가 압수수색을 하는 당일까지도 불법 살균소독제를 계속 팔다가 덜미를 잡혔음. 서울시는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살균소독제가 정상적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알고 싶다면,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main.do)와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http://ecolife.me.go.kr)에서 식약처 품목보고번호와 환경부 생활화학제품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음.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시민들의 생활필수품인 살균소독제를 비롯한 각종 보호 용품을 무허가, 불법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추적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음.

3. 원산지표시

1) 충북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 233곳 적발

(2022-02-22, 연합뉴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해 원산지 표시위반업소 233곳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힘. 이들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99곳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고, 미표시 업소 134곳에는 5천9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물렸음.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돼지고기 27건, 소고기 14건 순이었음. 충북지원은 전체의 28.7%(67건)가 통신

판매였다고 설명함. 이는 지난해 통신판매 적발 건수(15건)를 훌쩍 뛰어넘음. 충북지원 관계자는 “배달앱과 밀키트 등 농산식품의 비대면 거래가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말함.

2) 서울시, 설 대목 한우 원산지 속여 판 6개 업소 적발

(2022-03-02,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전후한 지난 1월 24~27일과 지난달 8~9일 축산물판매업소 및 온라인판매처 34곳을 대상으로 한우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비한우 등을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힘. 이번 점검은 사후 추적관리에 중점을 두고 위반 이력이 있는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수거와, 판매순위가 높은 한우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거를 병행하였음. 수거한 축산물은 한우 판별을 위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함. 한우 유전자 검사 결과, 원산지 위반 이력 업소 29곳에서 수거한 한우 중 5곳은 비한우, 1곳은 혼합으로 나타나 위반율이 20.7%에 달했음. 비한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2년간 2회 이상 적발 시 위반금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아울러 시민은 누구나 원산지위반 등 식품 관련 범죄행위 발견 시 결정적 증거와 함께 신고 · 제보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됨. 강옥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점검의 특징 중 기존 원산지위반 이력 업소 중 20%의 재적발률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며 “이는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불신을 초래할 뿐 아니라, 합법적인 축산물판매업소에도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인 만큼, 철저한 수사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원산지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함.

3) 중국산을 국산으로…고춧가루 원산지 속여 판 일당 구속

(2022-03-16, 서울경제)

중국산 고춧가루 101 t(약 15억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A(55)씨와 B(54)씨 등 2명이 구속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경남농관원)은 지난해 초부터 국산 건고추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돼 고춧가루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건고추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지난해 7~8월 시중 유통 고춧가루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함. 지난해 8월 양산시 소재 모 고춧가루 제조업체에서 판매중인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의심돼 해당업체에서 시중에 유통시킨 고춧가루를 주요 유통업체 및 통신판매 사이트에서 수집함. 경남농관원은 과학적 원산지 검정법인 이화학 분석과 현미경 분석 방법을 통해 중국산임을 밝혀내고 해당업소의 업주 A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함. 경남농관원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지속적으로 혐의를 축소하고 은폐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업소에 대한 압수수색 실시, A씨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을 공모한 B씨(54)의 존재를 밝혀내고 공범 B씨를 추적 끝에 검거함. 특히 이번 고춧가루 원산지 위반사건은 국내산에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다데기를 혼합시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이전의 방식과는 달랐음. 중국에서 제조한 고춧가루 향신료 조제품을 저율 관세로 수입한 후 이 향신료 조제품에서 고춧가루를 분리시켜 이를 다시 건조시킨 후 고추씨, 국내산 고춧가루 등과 혼합해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하는 방식의 신종 원산지 위반 수법으로 밝혀짐. A씨는 2020년 9월부터 1년 동안 소비자들이 육안으로는 고춧가루에 들어간 내용물이나 원산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함. 이를 위해 저가의 중국산 향신료 조제품에서 분리시킨 고춧가루와 고추씨를 혼합해 만든 제품 101 t(15억원 상당)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단량(600 g, 1 kg, 3 kg, 5 kg)의 비닐 소포장재에 포장해 전국의 주요 식자재 유통업체 및 통신판매 사이트를 통해 부정유통 시켰음. 이

들은 경북 영천시 등 주요 고추 주산지에서 국산 건고추를 구입한 것으로 허위 거래명세서를 만들어 단속을 피했으며 업체에서 관리하는 장부를 모두 거짓으로 꾸미고 이중장부로 보관하는 등 치밀하게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남. 특히 이 업소는 지난해 5월쯤에는 업소를 폐업시킨 상태로 야간에 몰래 원산지 위반 행위를 계속해 온 것으로 조사됨. 경남농관원은 "앞으로도 주요 농식품의 수입 및 가격, 통신판매 증가 동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로보틱 처리 자동화(RPA) 시스템 도입 및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 관리제도와 연계해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밝힘. 또"비대면 농식품 거래 증가 및 농식품 수입 증가 등에 대응해 통신판매 관리 강화, 수입농산물 등의 이력 관리, 효과적인 원산지 검정법 개발 등을 통해 농식품 원산지 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함.

4. 수입식품

1) 식약처, 수입 배추김치 해썹 적용 확대…농축수산물 밀키트 검사 강화

(2022-01-05, 농민신문)

올해부터 수입 배추김치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 HACCP) 적용 대상이 확대되고 가정간편식(HMR) · 새벽배송 등 최근 수요가 늘어난 먹거리와 유통채널에 대한 안전망도 확충될 예정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업무계획'을 최근 발표함. 식약처는 올해부터 수입 식품 안전체계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임. 우선 올 10월부터는 배추김치를 연 5000 t 이상 한국으로 수출하는 16개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 해썹이 의무 적용됨. 현재는 연 1만 t 이상 해외 김치 제조업체만 해썹 의무적용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음. 또 방사능 검사장비를 도입하는 등 일본산 식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통관단계의 구매검사 건수도 대폭 늘린다는 구상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달라진 외식 · 소비 환경에 발맞춘 먹거리 안전관리 방안도 추진됨.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소비가 증가한 상황을 감안해 배달음식으로 인기가 높은 중식 · 분식 등에 대한 위생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족발 · 치킨 등 다소비품목엔 음식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함. 배달음식점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주방공개 CCTV(폐쇄회로텔레비전) 사업'도 활성화함. 주방 위생상태를 CCTV를 통해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업소에 행정처분 감면 등 유인책을 제공할 예정임. 이밖에도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업소 등급을 지정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하고 신청요건 · 평가항목도 개선할 방침임. 새로운 수요가 반영된 먹거리의 안전도 강화할 예정임. 우선 물류센터에서 배송 전에 새벽배송 신선농산물 신속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됨. 최근 수요가 급증한 HMR에 대해선 벤조피렌 등 오염물질 조사 확대를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밀키트(Meal Kit · 반조리식품) 안전성 검사도 강화함. 또 배양육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제조 · 가공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임.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식품도 확대됨. 올해부터는 떡류 · 두부류 · 묵류 · 김치류, 땅콩 및 견과류 가공품류 등을 판매할 때도 열량과 당류 · 나트륨 등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함. 다만 의무표시제는 매출액에 따라 올해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됨.

2) "심근경색 유발하는 사탕?" 위해성분 함유제품 적발

(2022-01-20, 한국세정신문)

식품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들어간 사탕을 불법 수입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이 세관에 검거됨. 적발된 업자들이 수입 · 유통한 사탕에 함유된 식품 사용금지 물질은 심근경색, 고혈압, 두통, 홍조, 근육통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의사처방이 있어야 복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전체 21만5천개 사탕 중 20억원 상당 17만개의 사탕이 이미 판매됐으며, 이들은 정력캔디, 성기능보조제, 피로회복제 외에도 열공캔디로 광고해 수험생들에게 판매를 시도함. 부산세관은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함유한 사탕을 말레이시아에서 제조해 불법으로 수입 · 유통한 업자 A씨 등 40대 남성 2명을 관세법, 수입식품안전

관리특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20일 밝힘. A씨 등이 불법수입한 시가 20억원 상당의 총 17만개의 사탕은 주로 성인용품점, 판매 대리점 및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남.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4만5천개는 세관에 압수됨. 사탕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되면 안 되는 의약품 물질인 '데메틸타다라필'과 발기부전 치료로 자주 사용되는 한약재인 '쇄양'이 함유된 사실이 밝혀짐. '데메틸타다라필'은 발기부전치료제인 시알리스의 주성분인 '타다라필'과 화학구조 및 효과가 유사하며, 식약처에서 식품 사용금지 물질로 관리하는 '부정물질'임. A씨 등은 '비아그라 사탕'으로 널리 알려진 해머캔디를 밀수입해 시중에 유통했으나 식약처 등 관련부처의 단속으로 더 이상 판매가 어렵게 되자, 해머캔디의 일부 성분 및 색상만 바꿔서 마하캔디(Macah Candy)라는 상표를 사용해 불법 수입, 판매함. 부산세관은 마하캔디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수입식품법 위반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함. 부산세관은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휴대품,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SNS 등 온라인에서의 불법 유통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해 위해식품의 불법 수입 · 유통 행위를 적극 단속할 것이라고 밝힘.

3)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관리 강화…수입부터 판매까지 추적조사

(2022-01-27, 식품저널)

정부는 유전자변형 농산물 · 식품이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부터 제조 · 유통 · 판매까지 추적조사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 또, 수입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거나 현장점검 필요성이 낮은 수입영업자 등은 비대면으로 지도 · 점검할 방침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22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함. 유통관리계획 주요 내용은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 기반의 영업자 · 수입식품 효과적 안전관리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관리 강화를 위한 추적조사 등임. 식약처는 과학적인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수입식품 영업자를 지도 · 점검하고 수입식품 등을 수거 · 검사하는 등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임.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업체를 지도 · 점검 대상업소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수입식품을 직접 취급하지 않거나 현장점검 필요성이 낮은 수입 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비대면 지도 · 점검을 실시함. 식약처는 올해 도입한 비대면 지도 · 점검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800여 업소를 점검할 예정임. 또, 위해 예측 분석을 기반으로 위해도 점수가 높은 수입식품 중에서 유통단계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한 냉장 · 냉동 보관하거나 기준 · 규격 중 미생물 항목이 있는 식품 등을 수거 · 검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 항목, 위해 발생 우려 항목(부정물질 등) 등을 검사받아 유통하도록 영업자에게 명령하는 검사명령제는 확대해 유통 시 수입식품 안전에 대한 영업자 책임을 강화함. 위해 성분이나 원료를 함유한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위해정보, 리콜정보, 위해 발생 빈도 · 시기 등 정보를 분석해 위해 발생 우려가 큰 해외직구 식품을 선제적으로 구매 · 검사할 방침임.

이와 함께 소비자에게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란에 직접구매 해외식품 관련 정보 등을 일괄 제공함.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농산물 ·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표시해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부터 제조 · 유통 · 판매까지 추적조사해 철저하게 관리함. 식약처는 "유통관리계획 추진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유통관리를 보다 강화해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4) 수입식품 현지 실사 재개된다

(2022-02-24, 대한급식신문)

축산물과 과일 등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됨에 따라 위생 당국이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

하 식약처)는 올해부터 우리나라로 식품 등을 수출하려는 해외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 실사를 재개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힘.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점검 대상인 35개국 490여 개 업체 중 현장 방문이 가능한 곳부터 현지 실사를 하고, 방문이 어려운 국가의 업체는 서류나 영상 자료 등을 통해 비대면 조사를 시행함.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비대면 조사를 진행해 위생관리가 불량한 18곳에 대해 수입중단이나 검사강화 조처를 내린 바 있음. 또 조사에 응하지 않은 25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고, 폐업 등이 확인된 24곳은 등록을 취소함. 아울러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5년 주기 정밀검사' 제도가 오는 22일 시행됨에 따라 수입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질의응답 자료집'을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에 배포함. 5년 주기 정밀검사는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정밀검사나 무작위 표본검사를 받은 지 5년이 경과한 수입식품 등을 다시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 제도임. 자료집에는 ▲5년 주기 산정방법 ▲정밀검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등 제도 시행과 관련해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 등이 담겼고, 여기에 영업자들이 직접 수입하는 제품의 정기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과거 수입신고 이력 등 관련 정보도 함께 제공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5년 주기 정밀검사가 수입식품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 통관검사로 안전한 식품만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함.

5. 식중독사고

1) 대전시 초등학교 · 유치원 학생 60여 명 집단 식중독 의심

(2022-01-16, YTN)

대전에 있는 초등학교들에서 학생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 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음.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3일 점심에 같은 업체에서 제공한 도시락을 섭취한 학교 8곳과 병설유치원 2곳 68명의 검체를 채취해 식중독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음. 방학 기간 돌봄교실에 출석한 학생들과 병설유치원에서 방과 후 교육을 받는 원아들이 같은 도시락을 섭취한 거로 조사됐음. 보건당국은 해당 도시락 업체가 도시락을 납품한 다른 학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음. 식약처는 이 업체에 도시락 납품 중단 권고를 내렸음.

2) 대전교도소 수용자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역학조사

(2022-02-10, 연합뉴스)

대전교도소에서 식중독 의심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음. 10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대전교도소 내 다수의 수용자가 설사와 복통 등을 호소하며 의무실을 찾았음. 이상 증세를 확인한 교도소 측에서 전체 수용자를 대상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했더니, 300여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음. 대전교도소는 직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대응을 위해 지난 5일께부터 내부 식당 운영을 중단하고 외부 업체로부터 도시락을 납품받아 수용자에게 지급했던 것으로 알려졌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전보건환경연구원 등은 검체를 채취해 역학조사를 하고 있음.

3) 옥천 제조업체서 직원 46명 집단 식중독 증세

(2022-03-02, 뉴시스)

충북 옥천군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4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음. 2일 옥천군에 따르면 전날 이 공장 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직원 298명 중 46명이 설사, 구토, 두드러기 증상을 보였음. 공장 직원들은 닭볶음탕, 튀김, 된장국, 나물 등을 먹었음. 군 보건소는 식중독 증상을 호소한 직원의 가검물과 음식물을 채취해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음. 군 관계자는 "닭볶음탕과 튀김을 주로 섭취한 직원들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

로 업체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하겠다"라고 했음.

6. 건강기능식품

1) 식약처, 건기식 등 온라인 허위광고 178건 적발 (2022-01-06, 의학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명절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의약 제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010건을 집중 점검해 허위 · 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힘. 식약처에 따르면 장건강 · 면역력 증강 등을 표방하는 식품 광고 게시물 51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 · 과대광고 129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함.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 혼동시키는 광고 74건(57.4%), 질병 예방 치료에 대한 효능 · 효과 광고 30건(23.3%),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 위반 광고 12건(9.3%), 거짓 · 과장 광고 6건(4.6%), 소비자기만 광고 4건(3.1%), 의약품으로 오인 · 혼동시키는 광고 3건(2.3%)임. 적발 사례 중에는 일반식품(당절임)을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게 만드는 광고가 있었음. 일반식품(혼합음료)을 '비염영양제'로 광고하거나, 건강기능식품을 코로나19나 독감 등 질병 등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도 확인됨. 프로바이오틱스(고시형) 건강기능식품에 '질건강 유산균'과 같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광고하는 사례도 적발되었음. 또한 식약처는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의료기기 광고 게시물 300건을 점검해 허위 · 과대광고 6건을 적발함. 또한 미백 ·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200건에 대해서는 허위 · 과대광고 43건을 적발함.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누리집(사이트)은 온라인 쇼핑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하게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 · 상습 위반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힘.

2)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식품 모든 원료로 제조 허용 (2022-03-02, 식품저널)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인삼의 간 건강 기능성이 고시형으로 전환될 예정임. 또한 알로에 전잎을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단백질 제품을 만들 때 현재 두류, 유류, 난류, 어패류 등 일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원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원재료로 제조할 수 있도록 원료 인정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또한 그동안 개별인정형으로 인정받았던 인삼의 기능성인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고시형으로 전환해 누구나 인삼을 이용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음. 장기간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간독성 이상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알로에 껍질(라텍스 포함)을 함유하는 알로에 전잎은 기능성 원료 목록에서 삭제키로 함. 최근 유럽연합, 대만 등에서도 알로에 껍질이 포함된 알로에 전잎을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시작함. 다만, '알로에 겔'은 알로에의 껍질이 제거된 제품이므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유지하기로 했음. 식약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 하고, 5월 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확정할 예정임.

7. 유해물질&잔류농약

1) 식약처 "EU, 라면 수입 제한 조치 다음 달로 연기" (2022-01-13, YTN)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라면을 대상으로 한 유럽연합(EU)의 수입관리 강화조치 시행일이 다음 달 17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음. 앞서 EU는 지난해 한국산 라면 일부에서 유해 물질인 2(이)-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되자, 지난 6일부터 한국산 라면에 관련 검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음. 그러나 EU의 이런 조치가 국내 기업에 뒤늦게 전달

되면서 검사증명서 없이 선적됐고, 6일 이후에 유럽에 도착하는 물량은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했음. 이에 따라 식약처는 EU에 검사증명서 제출 규정 시행일을 늦춰달라고 요청했고, EU가 받아들이면서 다음 달 17일까지 유럽에 도착하는 수출용 라면은 검사증명서 발행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됐음.

2) 인체적용제품 위해성평가법 28일 시행

(2022-01-27, 식품저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총량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이 28일 시행에 들어감. 유해물질은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제품과 오염된 대기, 토양 등 환경에도 존재하는데, 유해물질이 다양한 경로로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축적되면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지금까지는 식품, 화장품 등 제품별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 관리해 유해물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알기 어려웠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하는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는 다양한 제품과 환경을 거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제품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유해물질 총량을 관리할 수 있게 됨.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평가 시행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유해물질이 많은 제품군을 알 수 있음. 위해성평가 대상은 기존 식품, 화장품에서 사람이 섭취 · 투여 · 접촉 · 흡입 등을 함으로써 인체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식품,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등 식약처 소관 전체 제품으로 확대됨. 또, 우리 몸에 들어와도 유해하지 않은 유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인체노출 종합 안전기준'을 정해 앞으로 섭취량과 사용량이 많은 제품군을 중심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할 수 있음.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해가 우려돼 사전 예방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제품의 생산 · 판매 등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일시적 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음. 이와 함께 통합 위해성평가 결과는 공개해 일상생활에서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소비자단체 또는 5명 이상의 일반 국민이 식약처에 유해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직접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위해평가 요청제도'를 도입했음. 식약처는 우리 국민이 많이 섭취 · 사용하는 제품에 포함돼 위해 우려가 크거나, 위해성평가가 시급한 유해물질 위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임. 유해물질 통합 위해성 평가 대상에는 더욱 다양한 제품과 환경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임.

3) 낙동강 · 금강서 재배한 쌀 · 무 · 배추서 청산가리 100배 독성물질 검출

(2022-02-09, 메디컬투데이)

낙동강과 금강 주변 노지에서 재배한 쌀, 배추, 무에서 청산가리 100배에 해당하는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이 검출됐음. 환경운동연합은 8일 낙동강과 금강 주변 노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구매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음. 분석 결과, 4대강 등 녹조라떼로 뒤덮인 강 주변 농작물이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음. 쌀과 무, 배추에서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의 독성을 지닌 마이크로시스틴이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 생식 독성 가이드 라인의 2~6배, 많게는 11배 가량 높게 검출된 것으로 추산됐음. 특히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 간 독성(간 병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마이크로시스틴(LR)'은 2010년 국제암연구기관(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된 물질임.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이크로시스틴과 같은 남세균 독성은 간 독성, 신경독성, 뇌질환 유발 물질로 조사됐으며, 최근에는 극소량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도 정자 수 감소와 난자 악영향 등 생식 독성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 뿐만 아니라 이번 조사에서 남세균의 또 다른 독성인 실린드로스

포몹신(Cylindrospermopsins)이 강에서뿐 아니라 인접 지역 지하수에서도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음. '실린드로스포몹신'은 미국 · 캐나다에서 강 · 호수 상태를 진단할 때 대표적으로 측정하는 물질 중 하나로, 간 · 신장 독성을 유발하는 실린드로스포몹신은 마이크로시스틴과 만났을 때 독성을 더욱 배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음. 환경련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이미 예견됐었던 일이었다"라고 비판했음. 지난해 8월 낙동강 · 금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7000ppb가 검출됐던 것을 꼬집은 것으로, 환경운동연합은 분석을 맡은 부경대 이승준 교수마저 "이렇게 높은 수치는 처음 본다"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로 악화된 수질을 지적하며, '환경 후진국'에서조차 있어서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해 질타했음. 무엇보다 환경련은 녹조 번성 시기가 지난 11월 채집한 쌀과 배추, 무에서 끓여도 분해되지 않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음을 강조하며, 녹조 번성 시기 출하 작물의 경우 더 고농도 독성이 포함될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시기별 · 지역별로 체계적인 조사를 촉구했음. 끝으로 환경련은 "정부는 남세균 독성 관련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 소통에 소홀하면서 민간단체 참여 위험 거버넌스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음. 이어 "그에 따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이 보고 있으므로 생식 독성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남세균 독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민간 단체 · 전문가와 함께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 국민 소통부터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4) 경기, 지난해 농산물 9627건 잔류농약 검사… 131건 '부적합'

(2022-02-18, 한국농어민신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농산물 9627건의 잔류농약을 조사한 결과 37개 품목 131건(1.3%)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을 적발해 압류 · 폐기 등 조치했다고 밝혔음. 조사 대상은 도내 4대 공영도매시장(수원, 구리, 안양, 안산) 경매농산물 5487건과 중소형 · 대형마트 유통농산물 4140건임. 잔류농약 검사항목은 340여 종으로 유통농산물 중 검출이 빈번한 농약을 중점적으로 검사했음. 잔류농약 검사 결과 △채소류 20품목(상추 19건, 시금치 14건, 청경채 10건, 쑥갓 9건 등) △엽경채류 5품목(미나리 3건, 부추 3건, 파 3건 등) △두류 1품목(녹두 5건) △기타 11품목(호박 2건, 당근 2건 등) 총 37품목 131건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됐음.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약은 살충제 성분이 90건(플룩사메타마이드 11건, 다이아지논 10건, 디노테퓨란 8건 등)으로 가장 많았음. 이어 살균제 성분 34건(프로사이미돈 7건, 클로로탈로닐 6건 등), 제초제 성분 10건(나프로파마이드 2건, 메타벤즈티아주론 2건 등) 순이었음. 연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 2268 kg을 압류 · 폐기했으며, 해당 부적합 농산물 생산지 관할 시 · 군에 결과를 즉시 통보해 행정 처분하도록 했음.

5) [식품안전 365]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목이버섯' 회수

(2022-02-28, 식품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카벤다짐이 기준치(0.13 ㎎/㎏)보다 초과 검출(0.50 ㎎/㎏)돼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음. 회수 대상은 일품농산㈜이 수입 판매한 중국산 목이버섯(포장일 2021.12.10, 유통기한 2023.12.9)과 이를 ㈜천가지고움(경기 남양주시)이 소포장 판매한 제품(제품명 (건)목이버섯, 유통기한 2023.1.19.)임.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음. 또,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음.

8. 기타

1) 공유주방 제도 본격 시행...법적 근거 마련

(2022-01-04, 식품음료신문)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왔던 공유주방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 위생적 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실증돼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음. 법적 기준은 △업종별 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 구비 △자격 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소비자 손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의무 가입 등이며, 공유주방 영업이 가능한 업종은 △식품제조 ·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임.

2)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식점 '맛'만큼 '안전 · 청결' 중요

(2022-02-18, 식품외식경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13일 발표한 '2021 국내외 외식트렌드'에 따르면 외식 소비자들이 '가볼 만한 음식점 또는 맛집'을 고를 때 청결과 위생을 두 번째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팬데믹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안전한 외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영향으로 보임. 전국의 만 20~69세 사이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에서 가볼 만한 음식점 또는 맛집 기준으로 1위는 음식점과 품질 94.3%(복수 응답), 2위는 청결과 위생 92.1%, 3위는 가성비 86%로 조사됨. 음식점 재방문 기준 역시 음식맛과 품질(94.9%), 청결과 위생(91.0)을 가장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2019년에 시행한 같은 조사에서는 식당 청결도가 22.7%(복수 응답)였던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 청결과 위생의 중요도가 크게 증가하며 달라진 모습임. 특히 혼자 식당을 갈 때 중요하게 여기는 요인으로는 청결도가 가장 높았고, 청결도 91.1%, 음식양 90.3%, 가격 86.7% 순임. 코로나19 사태 이후 1인용 메뉴를 제공하는 식당이 늘면서 1인 좌석, 1인 전용 메뉴 등과 같은 혼밥을 위한 별도의 조건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함. 한편 식당을 고를 때 청결과 위생 등 안전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진 건 해외도 마찬가지임. 미국 식품외식 매거진 푸드앤와인(Food&Wine)은 2021 푸드 트렌드에서 안전한 식공간에 대한 소비자 니즈, 프라이빗한 소규모의 외식 선호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공간에 대한 요구 때문임. 일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밀폐된 실내공간보다 테라스 좌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외식업소들이 테라스 형태의 좌석을 마련하는 등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외식 서비스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3) "불량 김치에 날벼락"…유통가, 내부 위생 점검서 주문 환불까지 '진땀'

(2022-02-28, 매일경제)

김치 명장 김순자씨가 운영하는 한성식품 자회사의 한 공장에서 썩은 김치 논란이 터지면서 유통가에 비상이 걸렸음. 김치업체는 강도 높은 내부 점검에 들어갔고, 이커머스 · 홈쇼핑업체는 불만 접수 및 반품 등 고객 대응에 힘쓰고 있음.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소김치업체가 모인 대한민국김치협회는 소속된 회원사 80여곳을 대상으로 내부 점검을 당부하는 공문을 보냈음. 제조시설 위생과 출고 대기 중인 김치 및 식자재 상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목표임. 불량한 상태의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어 비판을 받고 있는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은 김치협회의 회원사가 아니지만, 김치산업 전반으로 불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김치협회가 나섰다는 설명임. 홈쇼핑업계도 김치 라인업 전반을 재점검함. 한성식품 김치를 판매했던 채널은 NS · 공영 · 롯데 · GS홈쇼핑 등 4곳임. 이들은 썩은 김치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성식품 관련 방송 편성을 취소했음. 판매했던 김치가 효원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이 아니라고 공지하며 사태 진화를 시도했지만 소비자들의 원성에 결국 거래를 중단한 것임. 소비자 요청 시 환불도 해 주고 있음. 한성식품으로부터 김치를 공급받

는 급식기업 삼성웰스토리와 한화호텔앤리조트도 거래 중단 조치를 내렸음. 신선식품 전문 이커머스들도 한성식품 김치를 판매 중지했음.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현장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기반으로 공장의 위생 상태와 원자재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하기로 했음. 앞서 한성식품의 진천공장에서 곰팡이가 피고 악취가 나는 배추와 무를 사용해 김치를 만들었다는 내부고발이 나왔음. 또 완제품 포장 김치를 보관하는 상자에는 애벌레 알이 붙어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음. 이에 한성식품은 섭취할 수 없는 부분은 전량 폐기했다고 해명했음. 또 김순자 대표이사 명의로 "현재 법적 처분과 관계없이 해당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원인 규명에 착수한 상태"라며 "자체정밀검사와 외부 전문가의 정밀진단을 신속하게 실시해 한 점의 의혹과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 있음.

4) 미국 유명 분유 '시밀락', 감염으로 제품 회수 (2022-03-03, 현대건강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미국 애보트(Abbott)사에서 제조하고 미국 등에 판매된 분유 '시밀락(Similac)' 제품에 대한 위해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해외 직구로 구매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달 28일 애보트사 영아용 조제유 관련 크로노박터 감염사례를 발표하고 제품 회수 공지를 했음. 크로노박터는 자연환경에 널리 분포하는 장내세균의 일종으로 신생아 및 영아 감염되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식약처는 "시밀락 제품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이력은 없으나, 개인이 해외 직구로 해당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안내한다"며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온라인 쇼핑몰을 모니터링하여 판매가 확인된 2개 사이트에 대해 제품 판매를 차단했고,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했다"고 밝혔음. 또한 소비자에게 해당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위해정보 〉 해외 위해식품'에 제품정보를 게시했음.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소비자는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 〉 국제거래상담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달라"고 당부했음.

정리: 조태진(고려대학교)